

2019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정 정 (1교시) -



성 명 :

응 시 번 호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해 양 경 찰 청

행 정 법

1.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 ②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③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 ④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2.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상태책임을 지는 자가 경찰위반상태를 야기한 물건·동물 등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일 필요는 없다.
- ② 행위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경찰책임이 인정된다.
- ③ 사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경찰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행위자의 행위와 위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인과관계론을 기준으로 하되 경찰상 위험의 특징도 고려해야 한다.

3.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포함된다.
- ②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 ④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

4.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고는 사인이 행하는 공법행위로 행정기관의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② 신고의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이는 강학상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③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상대방인 당사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영업자지위를 이전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④ 「수산업법」 제44조(현 제47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③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다음 중 행정상 손실보상과 가장 관련 없는 내용은?

- ① 행정청이 위법하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 ② 사후적 행정구제제도
- ③ 개인의 특별한 희생
- ④ 공공 도로용지를 위한 토지수용

7.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
- ②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성격상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예외적인 경우에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③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 ④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적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8.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장애는 그 자동차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가 상태책임을 지며, 원 소유자는 상태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 판매와 같은 민사상의 법률관계는 민사관계불가침의 원칙에 상관없이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 ③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개괄조항)은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한계를 가진다.
- ④ 경찰소극의 원칙이란 경찰권이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9.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②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 ③ 경찰관은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등을 말한다.

10.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무허가건물을 삭제하는 행위
- ②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행위
- ③ 구청장의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행위
- ④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11.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여, 甲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피고적격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서울지방경찰청
- ② 서울지방경찰청장
- ③ 종로경찰서
- ④ 종로경찰서장

1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구분할 경우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한다.
- ② 내용이 법률상으로도 사실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한다.
- ③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④ 당해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13. 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례에 의하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권한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3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비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을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하여 비례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없다.
- ④ 행정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계획재량을 제한하는 형량명령이론으로 발전하였다.

1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 ①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도 추정된다.
- ③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유가 법령 해석의 잘못이었다면 그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된다.
- ④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다.

16. 행정법상의 시효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상실된다.
- ③ 사법(私法)상의 원인에 기한 국가채권의 경우에 납입고지에 있어 민법상 최고보다 더 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부과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17.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있다.
- ②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 ③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재결기관은 재결청이다.
- ④ 무효확인심판에 있어서도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18. 다음 보기 중 판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 ㉢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세입자가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을 다투는 소송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 의무의 부존재를 다투는 소송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비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 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 행정청의 재량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
- ②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재량행위이다.
- ③ 숙박용 건물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 ④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는 재량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처분은 위법하다.

21.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집행의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다.
- ② 대집행의 계고는 문서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구두에 의한 계고는 무효가 된다.
- ③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 ④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2.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의 문제는 성문법계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불문법계 국가에서도 문제가 된다.
-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 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는 법적확신설이 통설 및 판례이다.
- ④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지 않는다.

23. 다음 중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급계약에 의한 공공시설물 공사의 불완전한 이행
- ② 군복무를 위한 징집소환영장예의 불응
- ③ 산지전용허가 종료 후 산지복구명령의 불이행
- ④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의 계속

2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례에 의하면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영업재개신고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행위인 점에서 공법상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 ④ 명문의 금지규정이 있거나 일신전속적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25. 다음 중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에 가장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향리 사격장
- ② 철도건널목 자동 경보기
- ③ 공용지정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 ④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되는 시설인 여의도 광장

26. 판례가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전임강사임용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학과의 학생
- ㉡ 「건강보험료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의 취소소송에서 사단법인 대한 의사협회
- ㉢ 영업소 간 거리제한규정을 위배하여 한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기존의 일반 소매인
-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원 개발사업실시 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 분노관련영업허가를 받은 기존업자가 다른 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을 다투는 경우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27.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②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를 요한다.
- ③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 ④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위이므로 원칙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28.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행정절차법」에는 확약, 공법상 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절차법」은 문서열람청구권을 청문절차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29. 다음 중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 ① 법무부장관
- ② 농지개량조합
- ③ 서울대학교
- ④ 대구광역시

30.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청문을 해야 한다.
- ②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행정청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 행정행위로서의 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명의 대상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
- ② 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이다.
- ③ 하명은 대부분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행하여지나 일반처분으로도 행하여진다.
- ④ 하명은 법령의 근거를 요하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 졌을 때에 행할 수 있다.

32.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고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경우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 ④ 위법한 과징금의 부과행위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33. 조세부과처분이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일단 상대방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다음의 어느 효력 때문인가?

- ① 집행력
- ② 공정력
- ③ 내용적 구속력
- ④ 불가변력

34.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 ③ 절차적 한계와 관련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 ④ 행정상 즉시강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다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5. 공무수탁사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도로교통법」상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 견인업자
 - ②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 ③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상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의 기장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사인
36.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토지의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손실보상의 지급에는 개인별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37.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 ②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私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

38. 다음은 2019. 1. 12.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이다. 괄호 안 ㉠, ㉡, ㉢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 제9조(책임연령) (㉠)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과태료의 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0조(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① 26
 - ② 29
 - ③ 77
 - ④ 79
39. 다음 중 행정행위의 실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행정행위 대상의 소멸
 - ② 사기 등 부정행위
 - ③ 해제조건의 성취
 - ④ 행정행위 종기의 도래
40.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에게는 주장책임이 있다.
 - ③ 취소소송의 특성상 구술심리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법원은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사실문제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국제법

1.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준칙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 ②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 ③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 ④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UN 총회결의
2.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처음 명시적으로 도입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 배타적 경제수역 | ㉡ 통과통항제도 |
| ㉢ 군도수역 | ㉣ 역사적 만 |
| ㉤ 접속수역 | ㉥ 직선기선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관습법은 변형의 방식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 ② 영국은 조약에 대하여 수용이론을 채택하여 일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③ 미국은 인권조약을 대부분 자기집행적 조약으로 인정한다.
 - ④ 국제법상 의무이행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가 판단할 문제이다.
4.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
 - ②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하지 않는다.
 - ③ 접수국의 관헌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에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 ④ 파견국과 접수국 간에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관의 재산과 문서는 보호된다.

5.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통과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과통항권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한다.
 - ② 통과통항은 무해통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이고 신속해야 한다.
 - ③ 해협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해협 내에 항로대를 지정하고,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잠수함은 통과통항하는 경우에 반드시 물 위로 떠올라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6. UN해양법협약 제60조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였는데, 이 과학기지 주위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수역은 외연의 각 점으로부터 얼마 이내인가?
- ① 500m
 - ② 1,000m
 - ③ 2,000m
 - ④ 3,000m
7. 다음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은 참석한 판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 ②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③ 판결은 최종적이나 재판소와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못한다.
 - ④ 궐석재판제도가 인정된다.
8. 경비활동 중이던 해경함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외국선박을 발견하여 추적권을 행사하였다. 추적권을 행사한 여러 함정 사례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A함정) 외국선박이 충분히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시각신호와 음향신호를 활용하여 정선명령을 실시한 후 추적을 시작하였다.
 - ② (B함정) 추적 시작 후 중단 없이 계속 실시하였다.
 - ③ (C함정) 공해상에 있는 모선(母船)은 추적권이 없어, 우리 측 수역에 있는 자선(子船)에 대해서만 추적하였다.
 - ④ (D함정) 추적권 행사 중 추적 당하는 외국선박이 그 기국의 영해 내로 도주해 추적을 종료하고 복귀하였다.

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강행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일반국제법의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조약은 소급하여 무효이다.
- ㉡ 강행규범은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사회가 수락하고 인정하는 규범이다.
- ㉢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추후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 ㉣ 강행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규범이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10.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문제인가의 여부는 고정적이고 불변적이지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 ②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은 주권평등 원칙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 ③ 국제연합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국내문제 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다.

11. 항공테러 억제 관련 주요 국제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63년 항공기내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일명 1963년 동경협약)은 범죄인 인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② 1970년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일명 1970년 헤이그협약)은 범죄인의 인도 또는 소추를 명시하고 있다.
- ③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일명 1971년 몬트리올협약)은 비행중인 항공기 및 운항중인 항공기와 그 탑승자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 ④ 2010년 국제민간항공에 관련된 불법행위 억제에 관한 협약(일명 2010년 북경협약)은 적용 대상 범죄들을 정치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12. 국가가 자국의 영토이용으로 인하여 타국에 환경적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월경피해방지의 원칙을 확인한 국제판례는?

- ① 트레일 제련소 사건(Trail Smelter Case)
- ② 새우-바다거북 사건(Shrimp-Turtle Case)
- ③ 프랑스 핵실험 사건(Nuclear Tests Case)
- ④ 나우르 인산염지대 관련 사건(Certain Phosphate Lands in Nauru Case)

13.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독자적으로 재판관 선출절차를 진행한다.
- ② 재판관 선출과정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국제기구는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없다.
- ④ ICJ 규정 제36조 제2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ICJ 소장에게 선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1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권과 그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ICJ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 ② 소위 확대관할권은 ICJ 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ICJ 실행을 통해 인정된다.
- ③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규정의 선택조항 수락 선언은 ICJ에 대해서도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④ ICJ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분쟁을 재판사건(contentious case)으로서 재판할 수 있다.

15. UN해양법협약상 대륙붕의 최대 범위에서 상부수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영해
- ㉡ 접속수역
- ㉢ 배타적 경제수역
- ㉣ 공해

-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16. 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 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아임 얼론호 사건(the I'm Alone case)
- ② 인터한델 사건(Interhandel case)
- ③ 로터스호 사건(the S.S. Lotus case)
- ④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Rainbow Warrior case)

17.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오염규제에 관한 국제 규칙보다 국내 법령에서 완화된 오염규제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국가관할권하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 ②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 ③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 ④ 투기에 의한 오염

18. 핵연료의 재처리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국제사건은?

- ① 2010년 펄프공장 사건
- ② 2001년 MOX 제조공장 사건
- ③ 1974년 호주와 프랑스 간 핵실험 사건
- ④ 1941년 트레일 제련소 사건

19. 영해의 무해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해란 연안국의 평화와 질서 또는 안전을 해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② 통항이란 타국의 영해를 횡단하거나 내수로 출입하기 위하여 그 영해를 지나는 것이다.
- ③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자국 영해에서의 통항에 관한 위험을 공표할 의무가 있다.
- ④ 연안국은 외국선박의 자국 영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

20. 다음 중 국가의 영역 중 내수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만 ② 하천
③ 운하 ④ 접속수역

21. A국 국적의 甲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乙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경우 C국이 甲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 ① 속지주의 ② 속인주의
③ 수동적 속인주의 ④ 보호주의

22.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 권리의 근거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해양과학조사
- ② 인공섬의 설치
- ③ 풍력발전기 설치
- ④ 폐기물 투기에 의한 오염 규제

23.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접속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 ② 연안국이 당연히 갖게 되는 수역이 아니라 연안국의 선포를 요한다.
- ③ 해양자원이용과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국가관할권을 확장한 수역이다.
- ④ 접속수역의 해저로부터 역사적 유물을 반출하는 행위는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법령위반행위로 추정될 수 있다.

24.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55년 노테봄 사건에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적국과 그 국민 사이에 진정한 유대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② 1930년 국적법 저축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누가 자국의 국민인가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③ 1930년 국적법 저축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개인은 그 각각의 국적국에 의하여 자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 ④ 우리나라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5. UN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제1차적 책임기관이다.
- ② 비군사적인 강제조치로서 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한 바 있다.
- ③ UN헌장 제7장에 따라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비군사적 조치를 먼저 행하여야 한다.
- ④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지역적 약정이나 지역적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26. 다음 중 인류공동유산의 개념이 최초로 명문화된 국제조약은?

- ① 남극조약
- ②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③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에 관한 협약
- ④ 대륙붕에 관한 협약

27. 마르텐스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무기 또는 전쟁방식이 구체적 혹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군사필요원칙의 요구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 ② 1899년 헤이그 평화회의 러시아 측 대표인 마르텐스의 요청으로 헤이그 육전협약에 삽입된 전쟁법의 기본정신에 관한 것이다.
- ③ 조약 혹은 관습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것은 합법이라는 전통국제법의 기본사상을 전쟁법에 관한 한 부인하는 것이다.
- ④ 핵무기 사용 또는 위협의 적법성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서 언급되었다.

28.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생국은 다자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그 조약의 타당사국들로부터 국가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 ② 신생국이 타국과 상호 통상대표부 설치에 합의하는 경우 그 국가로부터 국가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국가승인 여부는 국가의 재량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한될 수 없다.
- ④ 정식 외교관계가 개설되지 않은 국가간에도 국가승인이 가능하다.

29. 다음 설명 중 국제법상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경비함정이 공해상에 있는 선박에서 선원들이 해적행위를 하고자 선상반란을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국제법상 해적행위로 검거하였다.
- ② 출동함정이 공해상에서 한국국적 어선(한국인 6명)과 일본국적 어선(일본인 8명)이 충돌한 것을 확인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두 어선에 대해 우리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였다.
- ③ 경비함정이 우리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외국 관공선을 발견하고, 6개월 전 우리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였다.
- ④ 경비함정이 우리 영해에서 항해중인 외국군함을 발견하고, 무해통항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영해법에 따라 최소 3일전 허가를 받았는지 파악하였다.

30. 다음 중 연결이 가장 바르게 된 것은?

- ① 선형이론 - 인접국 상호간 해양경계획정원칙으로서 기선으로부터 동일한 거리를 기준으로 경계를 획정한다는 이론
- ② 탈베그 원칙 - 선박의 항행 가능한 수로를 국제 하천의 경계선으로 잡는 방법
- ③ 인접성의 원칙 - 자연적인 영토의 증가로 영토를 취득하는 원칙
- ④ 등거리선 원칙 - 극지방의 영토취득에 관한 원칙

31. UN해양법협약상 통과통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영해
- ② 군도수역
- ③ 내해
- ④ 국제해협

32.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본토로부터 30해리 떨어진,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돌섬(rocks)도 그 자체의 영해를 가진다.
- ㉡ 본토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는 거리에 위치한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는 영해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 ㉢ 인공섬은 그 자체의 영해를 가질 수 없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33. 1982년 UN해양법협약과 관련하여 그 숫자의 크기가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영해의 최대 폭
- ㉡ 영해 최대 폭 한계선으로부터 접속수역의 외측 한계
- ㉢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최대 거리 (단, 역사적 만은 제외)
- ㉣ 군도수역에 있어서 직선군도기선의 최장 길이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34.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국제환경법의 원칙이 아닌 것은?

- ① 무과실책임의 원칙
- ②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 ③ 예방 및 사전주의 원칙
- ④ 오염자부담 원칙

35. UN해양법협약상 해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편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켜 통제하면서 해적행위를 하는 군함은 사적 선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③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을 충분한 근거없이 나포한 경우, 나포를 행한 국가는 그에 따른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④ 군함 또는 해적선 나포의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 선박은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다.

36.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실제로 2개국 간에 체결되는 우호통상항해조약에서 당사국 국민의 상호입국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 외국인의 입국은 당해 외국인의 자유재량사항이다.
- ③ 추방은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법심사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외국인을 추방할 경우 반드시 외교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37.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진국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회원국 간의 분쟁 시 개발도상국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 위원 중 적어도 1인은 개발도상회원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② 패널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③ 패널 위원이 패널 보고서에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 ④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주선·중개·조정 절차는 패널과정 중에도 계속될 수 있다.

38. 우주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주는 특정 국가가 점유하지 못하는 공간이며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② 천체의 탐사와 이용은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평등하고 자유롭게 행해져야 한다.
- ③ 천체에서의 군사적 이용은 금지된다.
- ④ 우주물체가 우주공간에서 제3국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동 우주물체의 국적국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39. UN해양법협약상 영해를 항행 중인 외국 상선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연안국의 형사관할권 행사사안으로 가장 맞지 않은 것은?

- ①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진압
- ② 선박의 일반승무원의 긴급한 연안국 지원 요청
- ③ 범죄의 결과로 연안국에 대한 직접적 영향 발생
- ④ 연안국의 평화 및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 발생

40. 다음은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 관련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국의 EEZ 경계선은 35개의 위도 및 경도로 표시된 좌표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 한다.
- ② 「한일어업협정」은 어업문제가 아닌 EEZ 경계 획정과 는 전혀 무관하다.
- ③ 한·일 중간수역에 대한 EEZ 획정은 관련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 ④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은 한·일 중간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업관계법령을 위반한 일본 어선을 단속할 수 있다.